

도내 일반건설업체 수주 1년 만에 1,600억원 감소

올 8월 강원도 일반건설업체의 건설 수주액 규모가 1년 새 1,6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강원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액은 2,152억9,800만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42.7%(1,602억8,100만원) 줄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 수주액은 도로·교량, 철도·궤도 등 수주 물량 감소 여파로 1년 전보다 64.8%(1,921억8,000만원) 줄어든 1,044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강원지청은 이 같은 수주액 감소의 원인을 지난해 8월 도내에 대규모 도로·건설공사 수주가 이뤄진 반면 올해에는 수주량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로 파악했다. 실제로 1년 전 도내에는 국호 5호선 춘천~화천 도로공사 및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사 등이 발주됐다.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건설협 도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30일 홍천 힐드로사이컨트리클럽에서 회원사 대표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나눔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입찰서 '페이퍼컴퍼니' 배제

경기도가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페이퍼컴퍼니' 퇴출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와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도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

공공기관 발주공사 사전단속 시행 불공정업체 확인편 영업정지 처분 입찰공고문에도 명기 '원천봉쇄'

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되면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 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 취소 또

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을 명시하는 등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도는 향후 '페이퍼컴퍼니 사전 단속'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시·군 발주공사 및 민간공사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세밀한 단속으로 건설한 건설산업 환경을 좁히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며 "도가 선도적으로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우병기자 mjver@